

양평 고속도로·검찰 특활비...여야, 7월 국회 막판까지 혈투

법사위·국토위 '뇌관'...대통령 일가 '무속 프레임' 논쟁 재돌입 김영호 통일 청문보고서 난관...27일 수해 법안 우선 처리 합의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도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당장,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무속 프레임' 논쟁에 재돌입한 가운데 지난 주 수해 피해로 정쟁을 자제하며 순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등에서도 한 판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학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 해명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백씨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으로, 중대한 국정 사안을 풍수지리학자의 조언을 들어 결정했다는 건 언어오도단"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땀땀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나. 대통령실은 왜 지금 침묵하느냐"며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감추려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백 교수를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라며 역술인이나 무속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경숙 여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외 등도 과거 백 교수와 만났다고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략을 한 날 풍수 전문가와 논의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관련 당 논평을 공유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괴담·주술 정치를 그

만두고 민생에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및 검찰 특수활동비를 두고 여야가 혈투를 벌일 태세다.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보 해체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을 둘러싸고도 민주당은 거액의 특활비를 검찰 총장이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낱말이 따질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방전은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중점 변경 의혹'을 두고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 질의에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 대대적으로 공세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여당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28일 열리는 교육위 현안 질의도 서초구 초등학

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교권 침해'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여당이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뇌관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빈손 종료'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극우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지명 철회'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한

인 2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 관계는 극한 대치 상태로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주초에는 우선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골라내는 협의가 진행된다. 한편, 대표적인 정쟁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주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타협의 길은 좁혀놓 보이지 않는다"며 "길어지고 있는 장마와 정쟁에 민심의 짜증지수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덕수 국무총리, 남성현 산림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산사태 우려 신고가 접수된 서울 서초구 관문사 인근 산책로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 여부를 25일 결정한다.

현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현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현재에 접수됐다.

현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현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다.

현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연합뉴스

윤 장모 법정구속...대통령실 "언급할 일 아냐"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빙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현정 사상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재판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극한 호우' 대응...총리 직속 민관 기구 신설 검토

22곳 일 강수량 최고치 경신...범정부 차원 협업·전문가 참여 '뉴노멀' 대책 강구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극한 호우' 등에 대응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3일 "정부뿐 아니라 민간 전문들까지 함께 숙의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응할 민관합동 상설기구 설치 검토하는 데는 '뉴노멀'에 따른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재 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고 데이터 등에 밝은 민간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이들의 아이디어를 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

려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해당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방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집중 호우 대응을 이유로 당정 협의를 미뤘다.

지난 13일부터 전국을 강타했던 극한 호우 현상은 정부의 기상관측 기록에서도 확인됐다.

이번 장마 기간 전북(7곳), 경북(3곳), 충북(5곳), 충남(5곳), 세종(2곳) 등 전국 22개 기상관측소에서 일강수량 극값(최고치)을 경신했다.

특히 전북 익산, 충남 논산과 정양에서는 종전 최고 기록의 1.5배를 넘어서는 일강수량이 기록됐다.

지난 14일 하루 동안 전북 익산 함라지점에서는 388mm(155% ↑), 충남 논산 연무지점에서는 326mm(157% ↑) 비가 측정됐다.

다음 날 충남 청양 정산지점에서도 293.5mm(157% ↑) 비가 내렸다.

극값을 경신한 22개 지점 중 73%인 16곳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했다.

이번 장마로 인한 전국 평균 강수량도 동기간 대비 역대 1위 수준(593.6mm)을 기록했다.

수해가 집중된 충북, 전북, 경북에서는 평년 대비 2배 수준의 비가 쏟아졌다.

올해 전국 강수량일수도 역대 1위(17.6일)로 평년(12일) 1.5배 수준이었다.

장마 시작 후 나흘 중 사흘은 비가 내린 수준으로, 전남·경북·경남의 강수량수는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